

충청남도 숙의민주주의 제도 운영 방안 연구

장 창 석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 전문연구원
mp0323@cni.re.kr

임 다 정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 연구원
dajung@cni.re.kr

이 연구는 충청남도에서 시행 준비중인 숙의민주주의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매뉴얼화를 통하여 실제 적용에 필요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함에 목적이 있음

CONTENTS

1. 연구목적 및 방법
2. 숙의민주주의 제도의 이해
3. 충청남도 숙의민주주의 제도
4. 충청남도 숙의민주주의 제도 운영 모델안
5. 결론 및 정책제언

요약

- 충청남도에서는 주민 수용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숙의민주주의 제도의 도입과 실행을 추진하고 있음
- 현재 제도 도입 초기로 숙의민주주의 제도의 다양한 주민참여 방식의 이해와 제도 운영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충청남도 숙의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 모델과 매뉴얼을 마련해 보고자 하였음
- 제안된 운영모델(안)과 매뉴얼(안)은 실무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의 초기 운영 가이드라인 역할과 향후 정책변화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제안된 다양한 형태의 숙의형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운영은 충남도의 특성을 반영한 고유한 숙의민주주의 형태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며,
- 주민주도의 숙의민주주의를 실천과 활용을 하여 주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일상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충남형 숙의민주주의의 확립을 위한 향후 정책과제로 제안함

01 연구목적 및 방법

1. 연구배경 및 목적

- 숙의민주주의는 전통적인 대의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의사결정 과정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적 방식이며, 참여자들의 숙의적 논의 과정을 거쳐 의제의 결정에 이르게 되는 방식임
- 숙의는 공공토론으로서 합리적 형식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견을 일치시키는 이해의 과정에서 이미 합리성을 내포하고 있으며(김소연, 2019), 합리적인 논의과정을 통하여 참여자들이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점에서 갈등을 예방하거나 완화시키고 정책결정이나 갈등과정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성을 가질 수 있음
- 최근 공공갈등의 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숙의기반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관심이 증가 하고 있음
 - 우리사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가 첨예한 갈등을 넘어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숙의와 공론화가 새로운 갈등해결 기제로서의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음
 - 이후 중앙정부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갈등 이슈를 공론화를 활용해 해결하려는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음
- 충청남도에서도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하여 도민의 의견수렴을 통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숙의민주주의 제도의 도입과 추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중임
- 하지만 제도 도입 초기로써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개념과 추진 방법에 대한 정책현장의 준비가 부족하여 이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숙의민주주의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타 자치단체와 충청남도 숙의민주주의 제도 비교 및 선행운영사례 분석을 통한 제도 운영 방향성을 제안하고, 단계별 추진사항의 매뉴얼화를 통하여 실제 적용에 필요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함

2. 연구대상 및 내용

1) 연구대상

- 연구의 대상은 ‘충청남도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와 ‘충청남도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시행규칙’을 대상으로 함

2) 연구방법

-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사례조사, 워크숍 등을 활용함
- 문헌연구에서는 숙의민주주의의 정의와 특성, 필요성, 활용가능한 숙의방식에 대한 검토를 수행함
- 사례조사에서는 충청남도 조례에서 다루고 있는 숙의방식인 원탁회의, 시민 배심원제, 공론조사에 대한 타지역 사례를 분석하고자 하였음
- 워크숍에서는 타지역 사례 및 충청남도 조례 분석에 따른 도, 시·군 관계관들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충남도 정책방향 설정에 활용하고자 하였음

3) 주요 연구내용

-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충청남도 숙의민주주의 제도를 대상으로 제도의 분석과 비교, 의견수렴을 통하여, 효율적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주요 연구의 흐름은 다음과 같음
 - 제1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며,
 - 제2장에서는 숙의민주주의의 개념적 정의와 필요성, 운영사례 분석을 통하여 숙의 유형별 진행과정을 살펴보려고 하였음

- 제3장에서는 충청남도 조례와 타자치단체의 조례 비교를 통하여 충청남도 숙의민주주의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으며,
- 제4장에서는 충청남도 숙의민주주의 제도 추진의 일반적인 프로세스를 제시하고,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숙의 방식의 추진에 대한 과정을 매뉴얼화하고 단계별 필요 사항들을 정리하였음
-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이와 같은 비교 및 분석의 결과를 종합하여 향후 충청남도 숙의민주주의 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함

연구의 흐름도	주요내용	연구방법
제1장	· 연구의 목적 및 방법	· 문헌연구
제2장	· 숙의민주주의의 정의 및 필요성 · 숙의민주주의의 제도 운영 사례	· 문헌연구 · 사례조사
제3장	· 충청남도 숙의민주주의의 조례 분석 · 조례분석 및 주요 의견 점검	· 문헌연구 · 워크숍
제4장	· 단계별 매뉴얼	· 업무협의회
제5장	· 결론 및 정책제언	

[그림 1] 연구흐름도

02

숙의민주주의 제도의 이해

1. 숙의민주주의 정의

- 숙의민주주의는 공적 결정을 내림에 있어 일반 시민들의 숙의(deliberation)를 중시하고 그 결과로 나타난 민의를 반영하려는 민주주의 이상을 지칭함
 - 현대의 시민참여이론이며 아직 명확한 개념적 통일은 이루어지지 않음
 - 참여민주주의, 숙의 및 의사소통, 협력적 거버넌스의 개념까지 포괄하고 있음
- 숙의민주주의는 공공정책에 대한 갈등과 관련하여 대의제 민주주의의 실패에 대한 대응으로 나타나게 됨
 - 시민 사회는 정책 과정에 더 많은 대중의 참여를 촉구했고 공공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과정에서 더 많은 공적 숙의와 협력적 의사결정이 요구된다고 주장
 - 이러한 논의들은 바탕으로 직접적인 시민들의 참여를 강조하는 ‘참여민주주의’와 숙의를 통한 공공선의 실현을 강조하는 ‘숙의민주주의의’가 등장함
- 숙의민주주의는 단순한 참여가 아닌 이성적 숙의를 중시함
 - 숙의민주주의는 정책결정의 영향을 받게 될 개인들이 정책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자율적 주체로서 의사결정에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참여민주주의와 일부 특성을 공유하지만,
 - 단순히 어떤 제안이 가장 많은 수의 지지를 받는가가 아니라, 공적인 숙의를 통해 어떤 제안이 가장 합당한 이유에 의해 지지되는가를 확인하고 이에 의한 의사결정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참여민주주의와 차별화됨
 - 숙의민주주의는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개방적이고 폭넓은 참여와 함께 참여자들의 자기성찰적인 자세에 기반한 진정한 숙의를 강조하고 있음
- 숙의민주주의는 폭넓은 참여와 참여 주체의 대표성, 자원과 권력의 균등성, 충분한 토론시간과 정보의 제공, 자기 성찰적인 숙의 참여 등이 중요한 요소임

2. 숙의민주주의의 필요성

- 우리 사회는 점점 다원화되고 복잡화되면서 특정 사안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선호와 이해관계 또한 다양해지고 있음
- 숙의민주주의는 전통적 의사결정과정인 변화된 사회의 다양한 욕구와 이해를 수용하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민주화 이후 성장한 시민사회의 정책과정에서의 참여욕구가 증가한 점에서 그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
 - 숙의민주주의는 기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로 지적되어온 대표의 실패와 다수결 정치의 약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함
 - 숙의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이며 합의자체가 목적은 아님
 - 시민들이 보다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절차중의 하나로써 특정 사회이슈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음
- 또한 갈등관리 과정에서는 숙의민주주의를 통한 주민참여적 의사결정과정은 갈등의 순기능을 도출하고 원활한 갈등해결을 위한 민주적 방식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음
 -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을 관한 규정」에서는 갈등영향분석과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을 갈등예방시스템으로 활용할 것을 제시하고 있음
- 숙의민주주의는 개인이나 집단의 이해관계와 가치관이 다원화된 시대에 다양한 갈등당사자들의 자발적이고 포괄적인 참여와 민주적이고 이성적인 토론을 통해 합의를 도출해냄으로써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의사결정의 정당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하지만 숙의민주주의를 통한 정책과정의 시민참여는 시간비용, 행정비용 등 정책의 결정비용을 상승시킬 수 있으며, 참여자가 늘어날수록 정책에 대한 합의가 어렵기 때문에 정책결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함
 - 또한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하는 당사자 집단들이 참여해 정책을 두고 경쟁하면서 갈등이 확대될 수 있으며,
 - 전문성과 정보가 부족한 일반 시민이 복잡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하거나, 규제정책이나 배분정책을 결정할 때 이해당사자 집단이 참여해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할 수 있어 제도의 운영에 유의해야 할 것임

3. 숙의형 주민참여 모델¹⁾

1) 공론조사 (deliberative poll)

○ 개념

- 과학적 확률표집을 통해 대표성을 갖는 국민들을 선발한 다음 이들에게 해당 이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심도 있게 토론하게 한 후 참여자들의 의견을 조사하고 이를 수렴하여 공공적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참여기법

○ 특징

- 공론조사의 핵심적 전제는 사람의 의견이나 선호는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고 토론이 이루어지게 되면 변화할 수 있으며, 그러한 심사숙고에 기반하여 변화된 의견과 선호가 보다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것임
- 공론조사는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일회적인 여론조사와는 다르며, 기존 여론조사가 시민들의 피상적인 의견을 조사한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숙의과정을 결합한 모델임

○ 절차 및 방법

- 공론조사의 첫번째 단계는 약 2000~3000명 정도의 표본을 대상으로 해당 이슈에 대해 의견조사를 실시한 다음, 이들 중에서 성, 연령, 지역을 감안한 비례할당 추출방법을 통해 다시 200~300명 정도의 대표성을 갖는 최종 참여자(일반시민)를 선발함
- 다음으로 선발된 참여자들에게 해당 이슈에 대한 찬반 주장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참여자들이 해당 이슈를 숙지할 수 있도록 함
- 다음 단계에서는 참여자들을 무작위로 소집단으로 나누어 해당 이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후에 있을 전체 토론회에서 전문가 패널에게 질문할 내용을 선정토록 함
- 소집단 토론회가 종료되면 이제 찬반측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과 함께 일반 참여자들이 토론하는 전체 토론회를 개최함
- 전체 토론회 직후에 일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해당 이슈에 대한 의견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공론조사의 과정은 종료됨

1) 참여연대시민과학센터(2002), 지숙위(2004), 지숙위(2005), 이영희(2005), 은재호 외(2008) 참조

○ 평가

- 1차 의견조사와 숙의적 토론 이후 실시한 2차 의견조사의 결과가 상당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여론조사보다 숙의를 통한 질적 의견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
-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점, 그리고 여타의 참여모델보다 많은 수의 참여로 인해 숙의과정의 곤란함도 나타날 수 있음

○ 적용대상

- 공론조사는 전국적·지역적 사안에 모두 적용될 수 있음
- 갈등의 내용적 측면에서도 가치의 문제와 이해관계의 대립시에도 적용가능한 참여 모델임
- 공론조사는 여러 가지 대안이 선택 가능한 복잡한 공공정책의 문제로서 일반 시민들이 그에 관한 지식, 정보, 이해가 부족한 경우 가장 적합한 주민참여모델임

2) 포커스 그룹(Focus Group)

○ 개념

- 심층적인 여론을 확인하기 위하여 특정 주제에 대해 소그룹 형태로 조직하는 토론집단

○ 특징

- 포커스 그룹 방법은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을 통해, 그리고 토론과 자기 성찰의 과정을 통해 변화, 재구성된 선호가 사회적으로 보다 바람직한 선호를 구성할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함
- 참여자들은 단순히 질문에 대답하는 수준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참여자간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들의 일상적인 경험과 인식을 제시하게 됨
- 따라서 포커스 그룹 방법은 안정적인 선호를 단순히 취합하는 방법이 아니며, 일방적인 하향식 정보제공과 교육도 아닌, 학습과정을 통한 발견적 여론수렴 방법이라 할 수 있음

○ 절차 및 방법

- 먼저 포커스 그룹의 목적을 명확히 설정하여 참여자를 모집하고 질문지를 개발함
- 이후 세션수, 시간, 기록방식, 장소 섭외, 사회자, 질문지 개발 등 구체적으로 진행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계획함

- 본격적인 진행은 참여자에게 포커스 그룹의 목적을 설명하는 것에서 시작되며, 참여자에게 사회자가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대답을 기초로 하여 토론을 전개
- 이후 운영위원회는 토론 결과물을 분석,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함
- 정리한 내용을 참여자들이 검토를 하여 잘못된 내용이나 왜곡된 내용을 수정할 수 있으며, 정책결정과정에 반영되기 위한 최종보고서를 작성함

○ 평가

- 기존의 여론수렴 방법이 참여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진 질문에 대해 답하는 수동적 정보 제공자로 머무르게 하는 것에 비해 포커스 그룹은 숙의를 통한 심층적 의견조사로서 능동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법이라 할 수 있음
- 또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비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되어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자신의 의견에 대해 다시 살펴볼 수 있어 정책 실행 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도 도움이 됨
- 그러나 정형화된 형식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되는 포커스 그룹은 자칫 산만해질 우려가 있어 효율적이지 못할 수도 있으며, 구성원 수의 제약으로 참여자들이 대표성을 갖기에는 다수 무리가 있음
- 가장 큰 한계점으로는 그룹 자체적으로 합의점을 도출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결정이나 대안 제시를 위한 수단으로는 적절하지 못함

○ 적용대상

- 대상 주제와 관련하여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파악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고자 할 때 이용할 수 있음
- 또한 집행되고 있는 계획이나 정책의 조정을 위해서 포커스 그룹을 이용할 수 있음

3) 시나리오 워크숍(Scenario Workshop)

○ 개념

- 지역적 수준에서 미래의 기술적 필요와 가능성에 대한 전망과 계획을 수립할 목적으로 일련의 관련된 행위자들 사이의 토론을 통해 서로 의견을 수렴해 가는 조직화된 작업모임

○ 특징

- 워크샵의 기초를 이루는 것은 특정한 주제를 둘러싸고 미래에 있을 법한 일련의 시나리오들이며, 각각의 시나리오들은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을 사회적, 기술적, 조직적 측면에서 기술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어야 함
- 운영방법의 핵심은 관련 행위자들간의 밀도 있고 체계적인 대화를 통해 전망과 행동 계획을 공동으로 작성해나가는 것임
- 지방의 개발 또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전망을 수립하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행동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을 목적하는, 지역개발 관련 정책결정에 보다 효율적인 시민참여 방안임

○ 절차 및 방법

- 시나리오 워크샵은 통상적으로 네 부류의 역할 집단들, 즉 정책결정자, 기술적 전문가, 기업/산업관계자, 시민들이 참여하게 됨
- 참가자들은 의제가 되고 있는 지역개발 관련 프로그램에 대해 각자 자신의 비전과 견해를 확고하게 발전시킨 다음, 다른 참가자들과 공유하는 내용이 무엇이고, 공유하지 못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밝혀냄으로써 최대한 합의적인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공동전망과 실천계획을 공공기관에 전달함

○ 평가

- 시나리오 워크샵이 사회 각 집단들 사이의 효과적인 대화와 토론을 통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시나리오 작성이 잘 되어야 하고, 동시에 참여자들이 활발하게 대화와 토론에 임해야 함
- 결국 시나리오 워크샵에서 핵심적인 것은 각 집단 사이의 대화임
- 일반시민과 전문가들이 대화를 통하여 각자의 경험과 지식을 교환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제안을 발전시켜 정책입안 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합의형성에 기반하여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갈등관리기법임

○ 적용대상

- 일반적으로 지역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유형의 기술과 방법에 대한 영향을 받는 집단의 수가 많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익을 표출하는 조직화된 집단이 존재하고 협상에 참여하는 개인들이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이슈가 규제협상에 적절하며, 평가 및 선택을 필요로 하는 전반적이 정책이나 발전계획 등에 적용됨

4) 규제협상(Regulatory Negotiation)

○ 개념

- 규제협상은 행정기관의 규제에 의해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협상을 통해 규제 내용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고, 행정기관은 이것을 바탕으로 규칙을 제정하는 제도임

○ 특징

- 행정기관이 주도하는 통상적인 하향식 규칙 제정과는 달리 이 제도는 일종의 상향적 의사결정 방식으로서, 규칙 내용의 결정 과정에 사회집단의 참여가 직접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공공참여적 갈등예방 기법의 하나로 볼 수 있음

○ 절차 및 방법

- 규제협상의 과정은 크게 협상 조직 단계, 협상 단계, 협상 후 단계 등 크게 세 단계로 구분됨
- 협상조직 단계에서는 규제협상을 적용할 이슈 및 참여자를 파악하고 주관자를 선정
- 협상단계에서는 규칙의 바탕이 되는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상이 진행 되는 단계임
- 협상 후 단계에서는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것을 토대로 행정기관이 작성한 규칙제정안은 관보에 공고되어 행정기관 내외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제출을 받으며, 공고된 규칙안에 대해 제출된 의견이 있으면 이것을 검토한 후 행정기관이 최종 규칙을 제정하여 공포하게 됨

○ 평가

- 사회집단과 정부 대표들이 동등한 지위로 협상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 결과 정해지는 규칙의 집행에 대한 참여의 효과성이 높은 장점이 있지만, 조직화된 사회집단이 아니면 협상위원회의 참여가 어렵기 때문에 참여의 대표성이 낮은 한계점을 보임

○ 적용대상

- 규제협상 모델은 미국의 환경청에서 환경규제정책을 입안할 때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관련 사안에 대한 이익집단이 분명히 존재하는 이익갈등의 경우에 잘 적용될 수 있음

5) 협력적 의사결정(CPS: Collaborative Problem Solving)

○ 개념

- 협력적인 대면적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 및 그룹간의 지식, 사고 및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공공의사를 결정하는 방법

○ 특징

- 공공기관, 환경단체, 일반시민 등을 포함한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하고 그들 모두가 동일한 결정의 권한을 가지는 효과적인 참여모델임

○ 절차 및 방법

- 크게 세 단계의 과정으로 나누어짐
- 준비절차에서는 가능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자를 선정하고, 중립적 조력인의 선정이 이루어지며, 구체적인 협의 절차를 결정함
- 협력적 의사결정의 단계에서는 문제의 정의와 분석, 문제해결방안의 제안과 평가, 해결방안의 결정이 이루어짐
- 마지막 단계에서는 도출된 해결방안의 실행이 이루어짐

○ 평가

- 환경단체나 일반 시민 등이 공공기관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으로서 참여의 효과가 큰 방법이지만, 타협을 통해 합의에 이르지 못할 위험도 존재함
- 조직화되지 않은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음

○ 적용대상

- 확실한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는 문제에 적용 가능하지만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가치의 갈등에는 적용이 곤란함

6) 라운드 테이블

○ 개념

- 특정 사안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그룹, 전문가, 공공기관이 원탁에 함께 모여 토론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방법

○ 특징

- 토론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결정에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특정 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토론을 통하여 해결방안에 대한 합의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함

○ 절차 및 방법

- 첫째, 준비단계에서는 참여자를 선정하고 회의진행 등의 역할을 수행할 자문단(consultants)을 구성함
- 두번째 단계에서는 전문가의 프레젠테이션이 이루어지며, 전문가는 문제에 대한 설명과 기술적 정보를 제공함
- 세번째 단계에서는 원탁회의가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는 브레인 스토밍, 즉 참여자들이 각자 종이에 아이디어를 적고 이를 진행자가 플립차트에 붙여 그룹의 견해를 함께 모으는 작업이 수행됨
- 이후 각 제안에 대한 토론과 평가를 거쳐 합의안을 도출함

○ 평가

- 환경단체나 일반시민 등이 공공기관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참여하여 숙의과정을 통해 정책이나 사업에 관한 문제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그 참여의 효과가 매우 큰 방법임
- 그러나 모든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그룹이 참여하지 못할 경우 공정하지 못한 결과를 도출할 위험이 존재함

○ 적용대상

- 구체적인 도시계획 및 지역계획에 이용될 수 있으며 정치적, 사회적 문제에도 적용 가능함
-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가치의 갈등에는 적용이 어려움

7) 시민자문위원회(Citizen's Advisory Committee)

○ 개념

- 지역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무작위로 선발된 시민들이 가지는 토론모임

○ 특징

- 시민자문위원회는 제한된 기간(대략 4,5일간) 동안에 사전에 주어진 공공적 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주민등록 명부에서 무작위로 선발된 20-25명의 시민 집단으로 구성됨
- 시민자문위원회는 시민들이 공동의 노력을 통해 해결을 추구하고 합의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상호간에 상이한 의견을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공공기관에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절차 및 방법

- 참가 시민들은 시민자문위원으로서 활동하는 기간 동안 일상적인 업무에서 면제되고,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 금전적 보상을 받음
- 전 과정은 사전에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준비된 프로그램에 따라 진행되며, 진행자가 전 프로그램 진행을 조율함
- 결정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전문 지식은 전문가들과 이해당사자들을 통해서 전달되며, 이를 토대로 5명씩으로 구성되는 소모임에서 집중적으로 토론함
- 이러한 절차를 통해 최종 결정된 권고, 평가, 의견 등은 ‘시민자문보고서’의 형태에 담겨져 위탁자, 정책결정자 등에게 전달될 뿐만 아니라 공중에게도 알려짐

○ 평가

- 무작위로 뽑힌 시민들은 다양한 경험과 배경을 지녔고, 또한 특정한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집중적으로 토론하고 내린 결정과 제안은 전문가들의 자문이나 행정 관료들이 내린 결정보다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평가한 것이고, 더 창의적이고 사회적 수용도가 높은 것일 수 있음
- 시민들의 제안이 직접 수용되기 힘든 사안이라 하더라도 시민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정책결정권자들은 시민들의 이해 관심과 가치를 더 분명하게 알 수 있고, 참가 시민들이 제시한 다양한 대안들은 최종 결정을 내릴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초로 이용될 수 있음

○ 적용대상

-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한 지역문제 해결에 있어 창의적이면서도 합리적인 제안들이 도출되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던 사안이 해결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음

8) 시민배심원제(Citizens' Juries)²⁾

○ 개념

- 무작위로 선별된 시민들이 중요한 공공문제에 관하여 전문가가 제공하는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숙의과정을 거쳐 결론을 도출, 정책권고안으로 제출하는 체계적인 시민참여 프로그램

○ 특징

- 시민배심원 구성은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참여자를 무작위로 선발함
- 전문가들로부터 주제에 관한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배심원들은 다양한 대안들을 숙의하고 모든 배심원들의 의견이 고려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게 됨

○ 절차 및 방법

- 시민배심원단의 선발은 전화설문을 통해 무작위로 이루어짐
- 1차적으로 전화 설문에서 호의적이었으며, 주제와 관련된 추가적인 정보를 받기로 동의한 모든 조사 응답자들이 시민 패널의 풀(pool)로 결정됨
- 시민배심원단은 일반적으로 12명에서 24명으로 구성이 되고, 일반 시민들을 대표하게 됨
- 그들은 자신들이 배심원에 참여하는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받으며, 부여된 과제에 대해 해당 전문가들과 증인들의 증언을 듣고 해결책을 토론하고 숙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됨
- 숙의 결과 나온 최종 결과는 정책 권고안의 형태로 일반에게 공개됨

○ 평가

- 숙의과정을 강조한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으로, 일반 시민들이 공공정책의 결정에 참여하여 학습과 토론을 통해 사회적 목표로서의 공공선을 추구한다는 데 의의가 있음
- 그러나 제한된 인원의 참여로 나타나는 대표성의 문제가 제기되며, 시민배심원의 과정을 통해 나온 결과가 기존의 공공영역에 정책적으로 수용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됨

2) 이와 유사한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으로는 독일에서 운영되고 있는 플래닝 셀(Planning Cell, Planungszelle)이 있음. 플래닝 셀은 복수의 토론회(Cell)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시민배심원제와 차이가 있음

○ 적용대상

- 시민배심원 모델은 1970년대 중반 미국의 제퍼슨 센터(Jefferson Center)가 국가 의료보건계획에 관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형성을 이루기 위해 고안한 시민참여의 구조화된 프로그램임
- 이 모델은 미국 뿐만 아니라 영국을 비롯한 유럽 지역과 호주, 캐나다 등지에서 공공정책 입안의 초기 단계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음
- 시민배심원에서 다른 많은 과제들이 환경문제 혹은 정책문제의 여러 분야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수준에서 활용될 수 있음
- 국내에서도 2004년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시민배심원제’가 실시된 사례가 있음

9) 합의회의(Consensus Conference)

○ 개념

- 선별된 일반 시민들이 중심이 되어 사회적으로 논쟁이 되고 있는 과학기술적 문제를 평가하는 책임을 맡아 진행하는 공개 포럼

○ 특징

- 합의회의가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사회적으로 논쟁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일반인들과 전문가, 그리고 정치인들 사이의 상호학습을 통해 지식과 인식의 간격을 좁히는 것이자, 시민들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정책에 대해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발언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시킴으로써 사회갈등을 예방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음

○ 절차 및 방법

- 합의회의의 첫번째 단계는 다양한 집단들을 대표할 수 있도록 선발된 15명 정도로 구성되는 시민패널(lay panel)에게 관련 주제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이 전문가들에게 질문할 항목을 만드는 데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것임
- 이후 3일에 걸쳐 계속되는 본 회의 단계에서는 시민패널이 다양한 전문가 의견들을 듣고 이를 취합함
- 그 다음 단계에서는 시민패널이 자신들이 청취하였던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평가한 기초 위에서 정부가 취해야 할 행동들을 권고형태로 제출하게 됨

○ 평가

- 합의회의는 과학기술정책의 입안 과정에서 그간 소외되어왔던 일반 시민의 견해를 적극적으로 반영시키고자 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술영향평가(technology assessment) 방법으로 널리 각광받고 있음

○ 적용대상

- 합의회의가 대상으로 하는 토의주제는 전국적 관련성을 갖는 공공정책인 경우가 많음
- 유럽과 미국, 일본 등지에서 지금까지 열렸던 합의회의의 주제로는 전자주민카드, 유전자조작식품, 도시폐기물관리정책, 국가전력정책, 방사능폐기물 생명복제기술, 의료보험개혁 등이 있으며,
- 우리나라에서도 1998년 1999년 두 번에 걸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주최로 각각 “유전자조작식품”과 “생명복제”를 주제로 한 합의회의가 개최된 바 있음

4. 숙의 민주주의 제도 운영 사례

- 숙의제도의 유형은 다양하지만 그 핵심적 구성요소는 시민의 참여, 참여자의 학습과 숙의,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이라는 세 가지로 볼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숙의제도 중 충청남도 조례에서 예로 들고 있는 공론조사, 원탁회의, 시민배심원제가 운영된 사례를 분석함

1)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³⁾

① 추진 배경

-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이후 세계 각국은 원자력발전정책에 대한 재검토 움직임이 시작되었으나, 우리나라는 원전을 확대한다는 정책을 변함없이 추진하면서 갈등이 발생함
 - 국내에서는 원전을 한국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정책이 추진되었으나, 일반국민들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원전의 위험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음
 - 2016년 7월 울산에서 규모 5.0 규모의 지진과 9월 경주에서 규모 5.8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자 원전에 대한 위험성이 더욱 증폭되었으며, 신고리 5·6호기 건설의 백지화 요구가 시작됨
- 문재인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탈원전 정책을 펼치고자 하였음
 - 하지만 건설을 전면 백지화하기에는 종합공정률이 28.8%에 이르고 건설 중단의 찬반 입장이 사회적·정치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등 사안의 심각성이 대두됨
- 이에 문재인 정부는 원전 축소 공약 이행 여부와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에 대한 문제를 국민과의 소통으로 결정하려 공론화 과정을 추진함
 -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는 그 결정이 미칠 여파가 컸던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태였음
 - 정부는 2017년 6월 27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방안을 논의하였고 공론화를 이끌어갈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함

3) 김길수(2018), 정우연(2022), 정현안 외(2020) 등 선행연구 요약 정리

- 이후 위원회 구성 절차와 국무총리 훈령이 규정되어, 공식적으로 2017년 7월 24일에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하였으며, 2017년 10월 20일에 권고안이 정부에 제출되기까지 약 3개월 동안 독립적인 지위에서 공론조사 전체 과정을 이끔

② 구성 및 운영

- 공론조사는 공론화 기법 가운데 하나이고 해당 의제에 맞게 변형되고 보완됨
 -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라는 의제에 맞는 새로운 시민 참여형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민참여단의 선출과 숙의과정을 설계함
- 공론화위원회의 구성
 - 1명의 위원장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인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인문사회 전문가 2인, 과학기술 전문가 2인, 조사통계 전문가 2인, 갈등관리 전문가 2인이 포함됨
 - 각 전문분야에 맞게 4가지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공론화 과정에 주요 의제를 선정해 검토하면서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수행함
- 시민참여단의 구성
 - 대한민국 시민대표를 추출한다는 구상으로 층화이중추출법을 사용해 선정함
 - 지역·성·연령대를 기준으로 층을 구성한 뒤 무작위추출 방법을 활용해 1차 표본을 추출, 다시 숙의과정에 참가할 시민을 추출하기 위해 성·연령대의견(재개/중단/유보)을 층화하여 최종 참여자 500인 선정 후 478명 참여
 - 기존 공론조사보다 엄정한 통계적 방법론을 적용하여 대표성을 확보함
- 숙의과정의 설계
 - 자료집, 이러닝, 오리엔테이션, 종합토론회를 기본으로 추진되었고 이를 보강할 수 있는 지역순회 공개토론회와 TV 토론회, 미래세대 토론회가 개최됨
- 숙의과정의 운영
 - 1차 조사로 대표성 있는 시민참여단 선정
 - 2차 조사로 오리엔테이션에서 진행된 시민참여단의 의견과 지식수준 파악
 - 3차 조사로 이후 자료집과 이러닝을 활용한 개인 숙의와 종합토론회를 통한 학습과 의견 확인
 - 4차 조사에서 시민참여단의 의견변화 및 최종 의견 도출

③ 운영 결과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숙의과정 결과를 바탕으로 권고안 전달
 -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권고
 - 원자력발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 변화 권고
 -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에 따른 보완조치 권고
- 정부는 권고안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후속조치 및 탈원전 로드맵 발표

2) 대구 지역에너지계획 시민원탁회의⁴⁾

① 추진 배경

- 대구광역시는 시민원탁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했던 국내 최초의 지자체임
- 2017년 「대구광역시 시민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원탁회의 관련 법적 기반을 마련함
- 「제5차 대구광역시 지역에너지계획」은 시민참여를 통해 수립하기로 연구참여기관의 의견이 모아졌으며,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대구시의 공론장인 원탁회의의 의제로 논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 4차 지역에너지계획이 이미 시민참여형으로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용역차원의 숙의과정에 국한되면서 계획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던 현실을 인식함
- 이에 시민원탁회의 의제로 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이 제안되면서 공식 의제로 선정됨
 - 원탁회의라는 지방정부 차원의 공론장에서 논의가 이루어짐으로써, 대구시의 5차 지역에너지계획은 4차 계획과 달리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음

② 구성 및 운영

- 자문단 구성
 - 대구지역의 에너지전환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시민단체 활동가로 구성된 시민참여 관련 자문단을 구성
 - 시민참여 워크숍의 구성 및 운영 방식, 워크숍의 평가, 후속 워크숍의 준비 및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 진행

4) 오용석 외(2016), 김정희(2019), 진상현 외(2019), 진상현 외(2020) 등 선행연구 요약 정리

○ 시민에너지기획단 참여자 선정

- 시민에너지기획단의 숙의적 참여의 공론조사 기법 적용
- 참여 시민의 규모는 100명으로 결정되었으며, 이들에게는 두 차례의 워크숍뿐만 아니라 최종 원탁회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조건이 제시됨
- 참여자 모집은 시민원탁회의에서 진행해오던 기존의 공지 방식뿐만 아니라, 시민 단체에서도 홍보하는 것으로 결정
- 무분별한 에너지 소비로 인해 발생하는 기후변화 같은 환경문제는 지금의 현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장기적인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10대의 참여 비중을 확대함

○ 토론과정의 설계

- 2차에 걸친 워크숍과 원탁회의 개최를 설계

○ 토론과정의 운영

- 1차 워크숍에서 지역에너지 계획 및 시민참여단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강의 진행
- 2차 워크숍에서는 다른 지역의 사례와 대구시의 4차 지역에너지계획에 대한 평가 및 5차 계획의 세 가지 시나리오가 제시
- 마지막 원탁회의에서는 시민들이 시나리오를 최종적으로 결정한 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사업을 논의하도록 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함

③ 운영 결과

○ 대구 지역에너지계획 시민원탁회의에서는 숙의과정 결과를 바탕으로 의견조사 및 결과 발표

- 1.5℃ 시나리오 지지 의견 발표

○ 대구시는 시민원탁회의의 발표에 따라 지역에너지계획의 목표로 1.5℃ 시나리오 채택 및 계획수립

3) 울산 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 건립 시민배심원제⁵⁾

① 추진 배경

- 울산 북구청은 음식물자원화시설 건립계획을 세우고 부지 확정 후 사업을 추진하지만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규모 집회와 시위를 벌임
 - 주민들은 음식물자원화시설의 건립계획이 전형적으로 하향식 정책결정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대단위 아파트 단지 인근에 시설이 입지하면서 가격하락 등의 이유로 반대가 이어짐
- 북구청은 주민간담회, 설명회, 전문가토론회 등을 통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모두 실패한 후 북구청의 공사가 재개되자 주민들의 반대 시위는 더욱 격렬해졌으며, 2004년 총선을 앞두고 음식물자원화시설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로 확대됨
- 이후 6인 소위원회(중재단)가 구성되고 소위원회는 시민배심원제를 의사결정 방안으로 제안하고 이에 북구청과 주민대표단이 합의하면서 배심원제로 본 사안을 결론짓기로 함

② 구성 및 운영

- 시민배심원제의 운영
 - 본래 시민배심원제도는 공공정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나, 울산 북구 시민배심원제는 이미 진행된 갈등의 해결을 위해 사후적 조치로 운영됨
 - 이로 인해 시민배심원제의 도입에는 합의하였으나, 추천단체, 인원수, 활동기간 등 구성과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는 이견이 발생함
- 배심원단의 구성
 - 북구청과 주민대표단은 울산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와 종교계에서 추천하는 사람들로 배심원단을 구성하기로 합의함
 - 13개의 지역 시민단체에서 37명, 천주교·기독교 각 3명등 모두 43명을 배심원으로 선정함

5) 조현석(2006), 김소연(2006), 은재호(2009), 정정화(2011) 등의 선행연구 요약 정리

○ 숙의과정의 설계 및 운영

- 5차에 걸친 배심원 회합을 통해 의사결정 합의
- 1차 배심원 회합에서는 사회자, 조정자, 간사 등 운영에 필요한 대표와 구체적인 회합 일정과 활동내용이 결정됨
- 2차 배심원 회합에서는 이해당사자들의 증언 청취와 이들과 배심원간 질의 응답, 배심원들간 토의가 진행됨
- 3차 배심원 회합에서는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입지 예정지역 현장답사와 인근 지역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세 곳에 대한 견학과 탐방조사가 실시됨
- 4차 배심원 회합에서는 배심원단 주관으로 공청회가 개최되어 일반주민들의 참석하에 구청과 주민측 의견 발표가 진행됨
- 마지막 5차 배심원 회합에서는 배심원단 회의가 진행되었으며, 서로의 승복과 보장 내용의 정리를 위한 합의서가 작성됨

③ 운영 결과

○ 울산 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 건립 시민배심원단은 투표를 거쳐 최종 결과로 음식물 자원화시설 건립을 결정하고 다음과 같은 권고내용을 전달함

- 합의각서의 서명당사자들은 합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함
- 북구청은 인센티브와 관련된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북구청은 자원화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약속한 주민참여 및 의견수렴 장치를 제도화 하여야 함

○ 울산 북구는 시민배심원단의 권고내용을 수용하여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발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함

03

충청남도 숙의민주주의 제도

1. 충청남도 숙의민주주의 제도 현황

- 충청남도는 도정에 대한 도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도민주권을 구현해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숙의민주주의 제도를 운영중임
- 관련 법제도로 「충청남도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충청남도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시행중임
 - 21. 7. 6. : 충청남도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안) 회부
 - 21. 7. 27. : 충청남도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안) 의결
 - 22. 1. 1. : 충청남도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시행
- 「충청남도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는 총 15조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제1조 목적에서는 충청남도의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하여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숙의민주주의 실현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제2조 정의에서는 숙의민주주의의 정의와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숙의제도를 원탁회의, 공론조사, 도민배심원제 등으로 정의함
 -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숙의민주주의 제도의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숙의의제의 제안과 이에 따른 숙의제도의 결정과 운영 방식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 제12조에서는 숙의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도민 교육을 규정하였으며, 제13조와 제14조에서는 결과의 활용과 충청남도 숙의민주주의를 수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2. 충청남도 숙의민주주의 제도 분석

1) 타 자치단체 제도화 사례

- 국내 자치단체의 숙의민주주의를 위한 참여적 의사결정 관련 조례 제정 현황을 조사한 결과 5개의 광역자치단체와 15개의 기초자치단체에 관련 조례가 제정됨
- 조례의 명칭을 살펴보면 숙의민주주의, 공론화, 갈등관리, 시민원탁회의 등 다양한 참여적 의사결정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광역자치단체 중 충청남도와 유사하게 숙의민주주의를 참여적 의사결정 방식으로 제정한 자치단체는 대전광역시와 제주도였으며, 인천광역시는 공론화 및 갈등관리, 대구광역시는 시민원탁회의, 경기도는 공론화 등 각각 다른 참여민주주의 방식을 조례로 제정하고 있었음
 - 기초자치단체들은 모두 시민원탁회의, 공론화위원회를 참여적 의사결정 방식을 중심으로 조례를 제정함
- 자치단체별 조례의 제정 시기를 살펴보면 모든 자치단체의 조례 시행일은 2017년 이후인 것으로 나타남

〈표 1〉 숙의민주주의 제도 관련 조례 현황(광역자치단체)

지역	조례명	시행일
인천광역시	공론화 및 갈등관리에 관한 조례	22.2.24.
대구광역시	시민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2.7.22.
대전광역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21.7.30.
경기도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	22.1.6.
제주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 조례	17.11.15.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검색기준일 : 2022. 8. 31.)

〈표 2〉 숙의민주주의 제도 관련 조례 현황(기초자치단체)

지역	조례명	시행일
서울시 광진구	공공갈등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9.12.30
대구광역시 서구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2.6.30.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1.12.30.
부산광역시 서구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19.11.5.
광명시	시민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9.12.20.
김포시	시민원탁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20.9.29.
여주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2.8.17.
창원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2.4.29
경주시	시민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2.8.4.
나주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18.10.5.
목포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1.7.12.
익산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1.8.
속초시	시민중심원탁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2.4.15.
정선군	지역현안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18.8.10.
횡성군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9.21.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검색기준일 : 2022. 8. 31.)

2) 속의민주주의 제도 조례 비교 분석

- 본 연구에서는 충청남도 조례를 기준으로 타 자치단체의 조례와의 주요 차이점에 대한 항목별 비교를 실시함
- 앞서 조사된 타 자치단체 조례중 충청남도와 유사하게 속의민주주의가 조례명에 포함된 광역자치단체(대전광역시, 제주도)를 비교 대상으로 선정함

① 조례의 구성

-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제주도의 조례는 공통적으로 목적, 정의, 자치단체장의 책무, 위원회의 구성, 주민교육, 재정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또한 속의의제의 제안과 제도 등의 절차를 담고 있으며, 공론화위원회와 주민의견조사 등의 조항을 규정하고 있어 공론화를 통한 여론수렴이라는 제도 운영형태 중심인 것으로 나타남

〈표 3〉 속의민주주의 조례 내용 비교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제주도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제2조 기본이념
제3조 기본원칙	제3조 기본원칙	제3조 정의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제5조 도민속의제도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 설치 및 기능	제5조 도민의 권리
제6조 구성	제6조 구성	제6조 행정정보 공개
제7조 임기	제7조 임기	제7조 속의형 정책개발과정에서의 주민참여
제8조 회의	제8조 제척·기피·회피	제8조 속의형 정책개발의 기능
제9조 속의의제 제안	제9조 해촉	제9조 속의형 정책개발의 청구
제10조 속의제도	제10조 회의	제10조 속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
제11조 공론화 위원회	제11조 속의의제 제안	제11조 주민의견조사의 실시
제12조 도민교육	제12조 속의제도	제12조 주민교육
제13조 결과환류	제13조 운영세칙	제13조 주민교육의 위탁
제14조 재정지원	제14조 공론화 위원회	제14조 수당 등
제15조 시행규칙	제15조 시민교육	제15조 재정지원 등
	제16조 결과환류	
	제17조 재정지원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검색기준일 : 2022. 8. 31.)

② 세부항목별 조례 비교

- 본 연구에서는 자치단체별 조례의 구성과 함께 항목별 구체적 내용에 대한 비교를 실시함
- 먼저 조례의 목적에서 차이점이 나타남
 - 자치단체별 조례의 목적이 숙의민주주의 실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음은 동일함
 - 그러나 숙의민주주의 실현의 목적에서는 충청남도과 대전시는 정책 및 현안의 의견수렴, 사회적 합의, 공감대 형성에 두고 있으나, 제주도는 행정참여의 활성화와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 확보에 두고 있는 차이점이 나타남

충청남도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하여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숙의민주주의 실현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를 이끌어 내기 위한 숙의민주주의 실현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도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의 행정참여를 활성화 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 하기 위하여 원탁회의, 공론조사 등의 숙의형 방법론 활용과 주민교육 등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하여 숙의민주주의를 실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충청남도 조례는 제2조에서 조례내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설명하고 있으며, 숙의민주주의와 숙의제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함
 - 대전광역시 조례에서는 충청남도 조례와 동일하게 제2조에서 정의가 나타나고 있으며, 숙의민주주의와 숙의제도에 대한 정의를 설명함
 - 제주도는 제3조에서 관련 용어의 정의를 설명하고 있으며, 숙의민주주의외에 주민, 주민참여에 대한 정의와 숙의제도를 세분화하여 용어를 설명하고 있음
 - 용어의 정의에서 설명하고 있는 숙의제도의 경우 충청남도는 원탁회의, 공론조사, 도민배심원제가 있으며, 대전광역시는 원탁회의, 공론조사, 시민배심원제, 제3단계 협력대화모델, 제주도는 숙의형 정책개발, 원탁회의, 공론조사, 시민배심원제로 나타나 자치단체별로 활용하고자 하는 숙의제도에는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충청남도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숙의민주주의”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정책결정 과정에 도민의 참여와 토론 등을 통한 공감과 합의를 실현하여 의사결정의 정당성을 높이고 도민이 성숙해지는 민주주의 형태를 말한다. 2. “숙의제도”란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원탁회의, 공론조사, 도민배심원제 등 숙의 토론 방법을 말한다.
대전광역시	<p>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숙의민주주의”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결정 과정에 시민의 참여와 토론 등을 통한 공감과 합의를 실현하여 의사결정의 정당성을 높이고 시민이 성숙해지는 민주주의 형태를 말한다. 2. “숙의제도”란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원탁회의, 공론조사, 시민배심원제, 3단계 협력대화모델 등 숙의토론 방법을 말한다. <p>② 제1항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대전광역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제주도	<p>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숙의민주주의”란 정책결정과정에 주민들의 참여와 토론을 통한 공감과 합의를 실현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정당성을 높이는 민주주의 형태를 말한다. 2. “주민”이란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주민참여”라 함은 제주자치도의 정책 등 의사형성 단계에서 부터 평가 단계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민과 제주자치도가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4. “숙의형 정책개발”이란 숙의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개발에 원탁회의, 공론조사, 시민배심원제 등의 방법론을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원탁회의”란 일정 수 이상의 주민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대상 정책에 대해 토론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회의 형태를 말한다. 6. “공론조사”란 일정 수 이상의 참가자 선정 후 의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토론을 거쳐 실시하는 여론조사 방법을 말한다. 7. “시민배심원제”는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기 위해 무작위 추출로 선발된 시민패널이 일정한 기간의 심사 숙고 과정을 거쳐 정책권고안을 도출하는 회의 형태를 말한다.

- 충청남도 조례 제3조에서는 숙의민주주의 실현과 관련한 기본원칙을 규정함
- 대전광역제도 동일하게 제3조에서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 또한 참여의 공정한 기회와 절차의 보장, 숙의민주주의 과정의 상호신뢰와 수평적 의사소통, 참여자들에 대한 관련정보 제공과 절차 공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제주도 조례에서는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유사한 항목으로 기본이념을 규정함. 기본이념에서는 주민의 참여 권리와 주민참여의 운영 이념, 주민의 자발적 참여 보장등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충청남도	제3조(기본원칙) 숙의민주주의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숙의민주주의 실현에 참여하는 도민에 대하여 공정한 기회와 절차의 보장 2. 숙의민주주의 실현의 모든 과정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수평적 의사소통 3.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하여 참여자들에게 법령의 범위에서 관련 정보 제공 및 절차 공개
대전광역시	제3조(기본원칙) 숙의민주주의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숙의민주주의 실현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공정한 기회와 절차를 보장할 것 2. 숙의민주주의 실현의 모든 과정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수평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것 3.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하여 참여자들에게 법령의 범위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절차를 공개할 것
제주도	제2조(기본이념) ① 주민은 누구든지 평등하게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이하 “도정”이라 한다)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주민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협력하여 주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동등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취지에 근거하여 적절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③ 모든 주민은 숙의민주주의 주민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제주도 모두 자치단체장의 책무를 규정함

- 세 자치단체 모두 자치단체장의 책무로 참여 제도화, 숙의제도 활성화, 참여자 교육, 도출결과 등의 내용을 규정함

충청남도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도민참여를 제도화 하고, 지속가능한 숙의제도 활성화 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숙의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도민 교육 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충청남도 도민숙의제도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제를 존중 하고, 숙의과정에서 도출된 결과 가 최대한 도정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숙의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실태조사 및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 성별분리통계를 작성 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시민참여를 제도화 하고, 지속가능한 숙의제도 활성화 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숙의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민 교육 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대전시민숙의제도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제를 존중 하고, 숙의과정에서 도출된 결과 를 최대한 시정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숙의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실태조사 및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 성별분리통계를 작성 하여야 한다.
제주도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숙의형 정책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성화 시책 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숙의형 정책개발에 의해 도출된 결과 를 최대한 존중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주민에게 숙의형 정책개발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교육의 기회 가 충분히 제공 되도록 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숙의형 정책개발을 제도화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행정정보 공개 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제주도 모두 숙의제도의 추진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에서 숙의의 방식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는 숙의제도 추진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에서 유사한 형태를 보였으나, 충청남도의 경우 ‘충청남도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숙의제도 추진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제주도의 숙의제도는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로 규정되어 있어 추진방식에 따른 용어의 차이는 있으나, 숙의제도의 추진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내용은 타 자치단체와 유사하게 구성됨

충청남도	제5조(도민숙의제도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하여 충청남도 도민숙의제도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숙의의제 선정에 관한 사항 2. 숙의방식 결정에 관한 사항 3. 공론화위원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숙의제도 운영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 기능은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9조의 충청남도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제5조(설치 및 기능)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전시민숙의제도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숙의의제 선정에 관한 사항 2. 숙의방식 결정에 관한 사항 3. 공론화위원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숙의제도 운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주도	제10조(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 ① 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의 유·무 확인 2. 숙의형 정책개발 추진 여부 결정 3. 원탁회의, 공론조사, 시민배심원제 등 숙의형 정책개발 방법의 결정 4.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5. 그 밖에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 숙의제도 추진위원회의 구성에서는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가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었으며, 제주도는 몇가지 다른점이 나타남
- 세 자치단체 모두 위원회의 구성은 15명을 기준으로 구성 인원을 규정함
 - 위원의 구성은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가 상시위원(공무원)과 비상시위원(외부위원) 등으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에 대한 인원수(8명 이내) 규정을 담고 있으나 제주도는 외부 인원에 대한 인원수 규정이 없음

- 위원장의 경우 충청남도과 대전광역시 상시위원(공무원)중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되어있으나, 제주도는 행정부지사가 의장이 되도록 규정함
- 세 자치단체 모두 외부위원의 경우 공개모집이나 추천을 통하여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함

충청남도	<p>제6조(구성) ① 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임기가 정해져 있는 위원(이하 “상시위원”이라 한다)은 7명 이내로 하고,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는 위원(이하 “비상시위원”으로 한다)은 8명 이내로 한다.</p> <p>② 위원장은 상시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비상시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상시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충청남도의회 의원 2. 학계·공공기관·도민사회단체 등의 숙의민주주의 전문가 3. 그 밖에 숙의민주주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p>④ 비상시위원은 사안별로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하거나 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p> <p>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숙의제도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p> <p>⑥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p>
대전광역시	<p>제6조(구성) ① 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임기가 정해져 있는 위원(이하 “상시위원”이라 한다)은 7명 이내로 하고,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는 위원(이하 “비상시위원”으로 한다)은 8명 이내로 한다.</p> <p>② 위원장은 상시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비상시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상시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원 2. 학계·공공기관·시민사회단체 등의 숙의민주주의 전문가 3. 그 밖에 숙의민주주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p>④ 비상시위원은 사안별로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하거나 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p> <p>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숙의제도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p>
제주도	<p>제10조(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 ② 심의회 의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의장은 심의회 위원 중에 호선한다.</p> <p>③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5명 이하로 구성한다.</p> <p>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제3조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되어 위촉된 위원의 수가 심의회의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이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등의 숙의형 정책개발 전문가 3.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된 주민 4. 그 밖에 도지사가 숙의형 정책개발에 충분한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제주도 모두 위원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함

- 충청남도 조례에서는 상시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였으며, 비상시위원의 경우 해당 의제에 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규정함
- 대전광역시는 충청남도와 동일하게 상시위원과 비상시위원의 임기를 규정하고 있으며, 타 조례와 다르게 위원 제척·기피·회피, 해촉에 관한 사항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음
- 제주도는 위촉직 위원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와 다르게 연임에 관한 내용도 규정하고 있음

충청남도	제7조(임기) ① 상시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비상시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해당 의제에 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대전광역시	제7조(임기) ① 상시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비상시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해당 의제에 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제8조(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추진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1.7.30.〉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주도	제10조(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 ⑤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위원회의 회의는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는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의 소집이 있을 경우 임시회를 개최하나, 제주도는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가 있을 경우에 회의 개최를 규정하고 있음

충청남도	제8조(회의) ① 추진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 한다. 1.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도지사는 추진위원회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워크숍, 포럼 등을 개최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제10조(회의) ① 추진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 한다. 1.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② 제5조제1호 숙의의제 선정은 상시위원이 결정하고, 의제 선정 이후는 전체 위원이 결정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장은 추진위원회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워크숍, 포럼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주도	제10조(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 ⑦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가 있을 경우 해당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은 청구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심의회를 담당하는 부서에 심의회 개최를 요청해야 한다.

○ 숙의의제의 제안 방식에서는 차이점이 나타남

-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는 자치단체장의 판단과 주민 연서에 의해 숙의의제를 제안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으나, 제주도는 주민 제안과 연서에 의해서 숙의의제를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
- 또한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는 각각 300명의 주민 연서로 숙의의제를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제주도는 500명의 주민연서로 숙의의제를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세 자치단체 모두 동일한 내용으로 숙의의제가 제한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충청남도	<p>제9조(숙의의제 제안) ① 도지사는 도정 현안 중 숙의를 통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을 숙의의제로 제안할 수 있다.</p> <p>② 도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도 주요 사업에 대하여 숙의의제로 제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 2. 수사나 재판 중에 있거나 행정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감사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항 4. 사업계획 및 예산이 확정되어 추진 중에 있거나 처리가 이미 종료된 사업 <p>③ 제2항에 대한 제안은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따른 선거권이 있는 300명 이상의 도민 연서로 청구인 대표가 청구한다.</p>
대전광역시	<p>제11조(숙의의제 제안) ① 시장은 시정 현안 중 숙의를 통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을 숙의의제로 제안할 수 있다.</p> <p>② 시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시 주요 사업에 대하여 숙의의제로 제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 2. 수사나 재판 중에 있거나 행정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감사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항 4.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추진 중에 있거나 처리가 이미 종료된 사업 <p>③ 제2항에 대한 제안은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따른 선거권이 있는 300명 이상의 시민 연서로 청구인 대표가 청구한다.</p>
제주도	<p>제9조(숙의형 정책개발의 청구) ①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제주자치도의 주요 정책사업이 숙의형 정책개발을 활용하여 수립될 수 있도록 도지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 2. 수사나 재판 중에 있거나 행정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4. 감사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항 5.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추진 중에 있거나 처리가 이미 종료된 사업 <p>② 제1항에 따른 청구는 19세 이상 주민 500명 이상이 연서하여 청구인 대표가 도지사에게 하여야 한다.</p>

- 숙의제도의 결정을 위하여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는 추진위원회를 활용하고 있으며, 제주도는 정책개발청구심의위원회를 각각 활용함

충청남도	<p>제10조(숙의제도) ① 추진위원회는 선정된 의제에 따라 적절한 숙의제도를 결정하여야 한다.</p> <p>② 도지사는 숙의제도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p>
대전광역시	<p>제12조(숙의제도) ① 추진위원회는 선정된 의제에 따라 적절한 숙의제도를 결정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숙의제도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p>
제주도	<p>제10조(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 ① 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숙의형 정책개발 추진 여부 결정

○ 숙의제도의 실무 운영에서는 자치단체별로 차이점이 나타남

- 충청남도과 대전광역시는 ‘숙의제도 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숙의의제와 숙의제도의 실행을 위하여 사안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론화위원회 주관으로 숙의제도의 운영과 결과보고를 규정하고 있음
- 제주도는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가 숙의의제와 숙의제도를 결정하게 되어 있으나, 실무운영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는 구성하고 있지 않음. 또한 숙의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직접적인 의견조사가 필요한 경우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충청남도	제11조(공론화위원회) ① 도지사는 숙의제도의 실무 운영을 위하여 사안별로 공론화위원회 를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 및 용역 등을 통해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진위원회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공론화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도민참여단 구성에 관한 사항 2. 숙의과정에 필요한 도민교육 및 정보공개 등에 관한 사항 3. 실태조사 및 여론조사에 관한 사항 4. 숙의제도 운영을 위한 토론회 개최 등 전반에 관한 사항 5. 도출된 결과 보고 및 도정 반영에 대한 환류 ③ 공론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대전광역시	제14조(공론화위원회) ① 시장은 숙의제도의 실무 운영을 위하여 사안별로 공론화위원회 를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 및 용역 등을 통해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진위원회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공론화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시민참여단 구성에 관한 사항 2. 숙의과정에 필요한 시민교육 및 정보공개 등에 관한 사항 3. 실태조사 및 여론조사에 관한 사항 4. 숙의제도 운영을 위한 토론회 개최 등 전반에 관한 사항 5. 도출된 결과(권고안 등) 보고 및 시정 반영에 대한 환류 ③ 공론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주도	제10조(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 ① 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3. 원탁회의, 공론조사, 시민배심원제 등 숙의형 정책개발 방법의 결정 제11조(주민의견조사의 실시) ① 도지사는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제주도 모두 숙의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주민교육과 교육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음

충청남도	<p>제12조(도민교육) ① 도지사는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도민에게 다음 각 호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주주의 기본원리와 도민의 권리 및 의무, 참여 등에 관한 교육 2. 숙의민주주의 의의와 제도에 관한 교육 3.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관리, 문제해결 등 토론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4. 그 밖에 숙의제도 운영에 필요한 민주시민교육 <p>② 도지사는 제1항의 도민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p>
대전광역시	<p>제15조(시민교육) ① 시장은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시민에게 다음 각 호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주주의 기본원리와 시민의 권리 및 의무, 참여 등에 관한 교육 2. 숙의민주주의 의의와 제도에 관한 교육 3.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관리, 문제해결 등 토론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4. 그 밖에 숙의제도 운영에 필요한 민주시민교육 <p>② 시장은 제1항의 시민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제주도	<p>제12조(주민교육) 도지사는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숙의민주주의 기본원리와 정치제도, 지방분권에 관한 교육 2. 주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및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 3.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토론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4. 그 밖에 숙의형 정책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p>제13조(주민교육의 위탁) ① 도지사는 주민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p>

○ 숙의제도 운영 결과의 활용여부에서는 자치단체별로 차이점이 나타남

- 충청남도와 대전시에서는 숙의제도로 도출된 결과의 정책반영 여부를 자치단체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책에 반영되었을 경우 추진상황에 대한 공개를 규정하고 있음
- 제주도는 숙의제도 운영의 정책반영이나 공개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숙의제도 추진과정에서 주민의견 조사를 시행한 경우에만 결과 및 의견을 표명하게 규정함

충청남도	제13조(결과환류) 도지사는 숙의제도를 통해 도출된 결과에 대해 도정 반영 여부를 결정 하고, 정책 반영 시 추진상황 에 대해서도 도민에게 공개 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제16조(결과환류) 시장은 숙의제도를 통해 도출된 결과에 대해 시정 반영 여부를 결정 하고, 정책 반영 시 추진상황 에 대해서도 시민에게 공개 하여야 한다.
제주도	제11조(주민의견조사의 실시) ② 도지사는 주민의견조사 후 조사 결과 및 견해 를 15일 이내에 표명 하여야 한다.

-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제주도 모두 숙의제도를 위한 예산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대상 또한 주민역량 강화, 의사결정지원, 연구·조사 활동 등으로 동일하게 규정됨

충청남도	제14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도민역량 강화 2. 주민자치·마을공동체 숙의제도 활동 의사결정 지원 3. 숙의민주주의 관련 연구·조사 활동
대전광역시	제17조(재정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시민역량 강화 2. 주민자치·마을공동체 숙의제도 활동 의사결정 지원 3. 숙의민주주의 관련 연구·조사 활동
제주도	제15조(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숙의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주민역량강화 2. 마을공동체 숙의형 방법론 활용 의사결정 지원 3. 숙의민주주의 관련 연구·조사 활동

- 세 자치단체 모두 숙의제도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세부 시행규칙 형태로 제정하였음

충청남도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대전광역시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주도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3) 비교 분석의 시사점

○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정의에서 나타난 필요성

- 세 자치단체 모두 숙의민주주의를 ‘정책결정 과정에 주민의 참여와 토론 등을 통한 공감과 합의를 실현하여 의사결정의 정당성을 높이고 주민이 성숙해지는 민주주의의 형태’로 정의하고 있음
- 이러한 정의를 종합해 보면 현재 자치단체별 정책과정에서 주민참여와 사회적 합의도출이 미흡하며,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제도로써 숙의민주주의의 필요성을 유추해 볼 수 있음

○ 기존 조례(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이하 갈등 조례)와의 차별성 부족

- 갈등조례에서는 그 대상을 공공정책(충청남도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자치법규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충청남도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이하 숙의조례)는 숙의 대상을 도정 현안, 도 주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적용 대상이 유사함
- 갈등조례에서는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의 활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숙의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숙의제도는 원탁회의, 공론조사, 도민배심원제 또한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임
- 또한 갈등조례에서 갈등사안에 대한 합의와 결과문 작성, 이행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숙의조례 역시 공론화 과정을 통한 사회적 합의와 결과 환류에 대한 부분을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유사성은 갈등조례와 숙의조례와의 차별성을 찾기 어려우며, 갈등관리와 숙의를 주민참여와 사회적 합의 도출 등 동일한 목적의 연속적인 과정으로 이해하고 통합 운영할 필요성이 있음

○ 숙의제도 결과에 대한 활용성 미흡

- 충남도 숙의조례에서는 숙의제도를 통해 도출된 결과에 대해서 도지사가 도정 반영여부를 결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정책 반영시 추진 상황에 대해서 공개하게 규정되어 있음
- 결과의 공개 및 정책 투명성이 반영된 항목이기는 하지만, 숙의과정에서 참여한 도민들의 의견이 도지사에게 전달되는 권고문 형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활용에 대한 강제성을 지니지 못함

3. 충청남도 관계관 의견 수렴

1) 워크숍 개최

- 충청남도 숙의민주주의 제도는 2022년 1월 시행되었으나, 운영된 사례가 없음
- 제도 도입 초기 정책현장에서는 조례에 대한 인지도, 이해도가 낮은 상황으로 도내 관계관 워크숍 개최를 통하여 제도에 대한 이해와 제도 적용 기준 및 실제 정책현장에서 활용가능한 세부 실행절차를 마련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였음
 - 주요 참여자는 충남도 및 15개 시·군 갈등관리 관계관이었으며, 숙의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민·관 협력강화를 위해 도내 갈등관리활동가,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합동 워크숍을 개최함

2) 주요 내용

- 제도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타 자치단체 및 도내 사례 학습을 실시함
 - 정책공유 차원의 충청남도 숙의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이해와 활용방안 논의
 - 정보교류 차원의 숙의형 주민참여 방식의 필요성과 세부 운영 방안 공유
- 충청남도 숙의민주주의 제도 운영(안) 제안 및 의견 수렴을 실시함
 - 분야별·사안별 도-시·군간 협력 방안 토론 및 의견 수렴

3) 참여자 주요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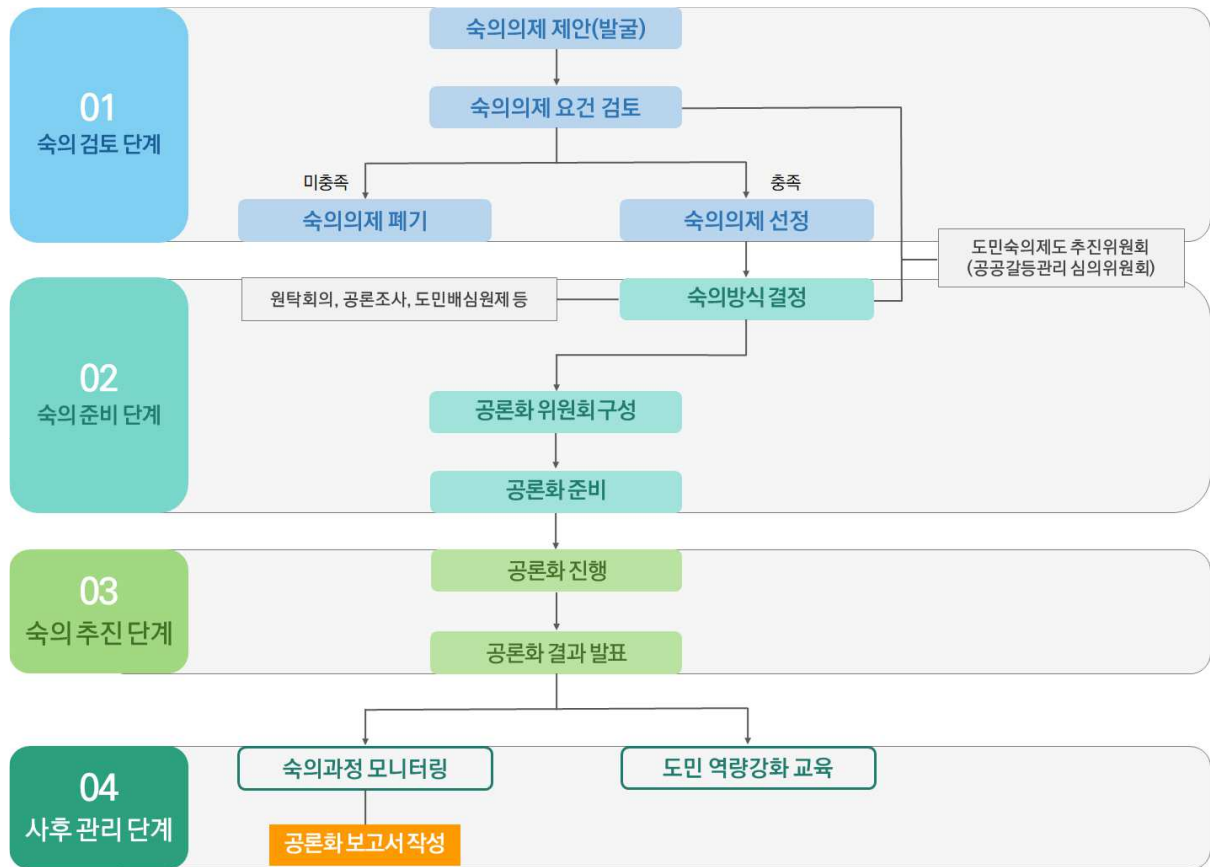
- 본 연구의 수행과정에서 충청남도 숙의민주주의 제도 운영(안)에 대한 의견과 향후 제도의 운영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숙의민주주의 제도 운영을 위해 제안되는 사안의 경우 그 대상에 대한 판단이 모호하며, 도민 300명의 연서로 숙의의제가 제안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가 악용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었으며,
 - 실무자 입장에서는 숙의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개념적 인식 어려움이 있으며, 제도 추진 과정의 주체에 대한 명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워크숍을 통하여 숙의제도에 대한 이해도는 향상되었으나, 일반 주민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과 시민사회와의 협력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수렴됨

04

충청남도 숙의민주주의 제도 운영 모델(안)

1. 충청남도 숙의민주주의 제도 운영 모델(안)

- 본 장에서는 앞서 검토된 충청남도 숙의민주주의 조례 분석, 활용 가능한 숙의제도, 타 자치단체 운영사례, 도,시·군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충청남도 숙의민주주의 제도 운영 모델(안)’ 과 단계별 매뉴얼을 제안함
 - ‘충청남도 숙의민주주의 제도 실현 조례’ 에 담겨진 내용과 사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충청남도 숙의민주주의 운영체계도(안)을 제시
 - 운영체계도(안)에서는 숙의의제의 발굴 → 숙의의제 요건 검토 → 숙의의제 선정 → 숙의방식 결정 → 공론화 운영 등의 절차로 이루어지는 체계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고자 하였음
- 충청남도 숙의민주주의 제도 운영 모델(안)은 크게 네 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단계별로 수행해야 할 주요 절차들은 다음과 같음
 - 숙의 검토 단계 : 숙의의제 제안(발굴), 숙의의제 적합성 검토, 숙의의제 선정
 - 숙의 준비 단계 : 숙의방식 결정, 공론화위원회 구성, 공론화 준비
 - 숙의 추진 단계 : 공론화 진행, 공론화 결과 발표
 - 사후 관리 단계 : 숙의 과정 모니터링, 도민 역량강화 교육
- 충청남도 숙의민주주의 제도 운영 모델(안)에서는 조례에서 나타나지 않은 항목들을 단계로 포함하였음
 - 숙의 추진 단계에서 공론화 결과 발표에 대하여 언론브리핑, 보도자료 배포, 홈페이지 게재, 사업부서 및 관련 자치단체 통보 등의 방법을 체크리스트에 포함
 - 사후 관리 단계에서 숙의 과정 모니터링, 도민 역량강화 교육에 대한 내용과 방법을 체크리스트에 포함



[그림 2] 충청남도 숙의민주주의 제도 운영 체계도(안)

2. 운영 모델 단계별 매뉴얼

숙의 검토 단계		숙의의제 제안(발굴), 숙의의제 적합성 검토, 숙의의제 선정	
〈숙의 검토 단계〉 체크리스트		체크	
		예	아니오
숙의의제 제안(발굴)	300명 이상의 도민 연서로 청구인 대표가 청구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도정현안이나 도 주요사업에 대한 의제인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숙의의제 대상 적합성 판단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인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수사나 재판 중에 있거나 행정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인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감사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항인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사업계획 및 예산이 확정되어 추진 중에 있거나 처리가 이미 종료된 사업인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숙의의제 선정	도민숙의제도 추진위원회(공공갈등관리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숙의의제의 선정 과정은 도민숙의제도 추진위원회(공공갈등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진행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숙의 검토 단계〉 유의사항			
숙의의제 제안(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남도의 숙의 의제는 300명 이상의 도민연서에 의한 대표청구나, 도정현안이나 도 주요 사업에 대한 도지사의 제안으로 추진할 수 있음 주관 부서에서는 숙의의제 제안이 접수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조례 제9조 제안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 대표와 총괄부서에 통보하고, 제안 요건 충족시 총괄부서에 숙의의제 선정여부를 요청하여야 함 주관부서는 서명부 기재사항(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명 또는 날인 등)의 누락 및 식별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시군에 서명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에 대한 유효성 확인을 요청할 수 있음 <p>※ 확인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무효로 처리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명부 제출일 기준 18세 미만이거나 충청남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서명자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거나 식별이 불가능한 서명자 동일인이 중복 서명하였을 경우 최초 이후의 서명자 기재사항 일부가 나머지 기재사항과 부합되지 않는 서명자 		

<p>숙의의제 대상 적합성 판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괄부서는 제안조건이 충족된 숙의의제에 대하여 적합성 판단 과정을 추진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괄부서는 숙의의제의 적합성 판단을 위해 ‘충청남도 도민숙의제도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음 • 총괄부서는 조례 제9조2항에서 제외하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 - 수사나 재판 중에 있거나 행정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감사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항 - 사업계획 및 예산이 확정되어 추진 중에 있거나 처리가 이미 종료된 사업 • 총괄부서에서 적합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청구를 반려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부서가 청구를 반려할 경우 그 사유를 적어서 청구인 대표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이의신청 방법과 기간도 명시하여야 함 • 청구인 대표는 반려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인 대표는 반려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함 - 주관부서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총괄부서로 추진위원회 회의개최를 요청하며, 주관부서는 추진위원회 심의결과 제안요건을 충족한 의제에 대해서는 숙의의제 선정여부까지 함께 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총괄부서는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시위원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이의신청된 숙의의제의 제안요건 충족여부를 심의·의결하고, 심의결과를 주관부서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함 - 숙의의제 제안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의결한 경우 주관부서는 총괄부서에 숙의의제 선정여부를 요청하여야 하고, 제안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의결한 경우 주관부서는 이의신청을 반려하여야 함
<p>숙의의제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괄부서는 숙의의제의 선정을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남도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음 -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의 숙의의제 선정여부 요청을 받으면 제안접수일(이의신청 접수 시 이의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상시위원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숙의의제 선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상시위원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 의결로써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 추진위원회에서는 제안되고 적합성 판단이 완료된 숙의의제에 대한 숙의제도 추진 여부를 결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 위원회는 숙의의제의 선정, 선정된 의제의 숙의방식, 공론화위원회 등 숙의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함 • 숙의의제가 결정되면 즉시 공표하고, 홈페이지 및 언론 등을 통해 도민들에게 알리도록 함

숙의 준비 단계	숙의방식 결정, 공론화위원회 구성, 공론화 준비
----------	----------------------------

〈숙의 준비 단계〉 체크리스트		체크	
		예	아니오
숙의방식 결정	숙의방식은 숙의의제의 성격에 적합한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공론화위원회 구성	숙의방식을 전담하는 별도의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위촉된 위원 가운데 제척·기피·회피 대상자는 없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공론화위원회 운영을 위한 회의소집 및 의사결정 규칙이 마련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위촉된 위원들에게 공론화 위원으로서 비밀유지 의무를 고지하고, 의무 이행의 서명을 받았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공론화 준비	공론화 추진 기간이 적절한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공론화 방식에 맞는 절차가 설계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공론화 방식과 기간에 맞는 일정이 마련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숙의 준비 단계〉 유의사항	
숙의방식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진위원회는 선정된 의제에 따라 적절한 숙의제도를 결정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례에서 규정한 활용할 수 있는 숙의제도는 공론화, 원탁회의, 공론조사, 도민배심원제임 필요시 추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숙의방식의 변경 및 추가 가능함 총괄부서는 숙의방식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함
공론화위원회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진위원회는 선정된 숙의방식에 따라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도지사에게 제안함 추진위원회와 주관부서는 선정된 숙의의제에 대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과 운영을 추진함 공론화위원회는 추진위원회에서 권고하는 인원 이내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주관 부서장이 간사가 되어 공론화위원회 업무를 수행함 공론화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참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대상자가 있는지 확인하여야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그 밖에 위원이 해당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론화위원회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론화위원회는 구성된 이후 운영 및 의사결정을 위한 운영규칙을 제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적으로 추진위원회의 운영 규칙을 준용하며, 사안별 공론화위원회의 특성을 반영한 운영규칙 마련이 필요함 – 운영규칙의 마련은 합의 결정을 위한 기본적인 원칙을 정하는 것이 중요함 • 공론화위원회 위원은 성실성, 독립성, 중립성 등의 의무를 가지며, 공론화위원회 참여 과정의 의무 이행을 위한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함이 바람직함
공론화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론화위원회는 선정된 공론화 방식의 운영을 위한 기간, 절차, 일정에 대한 면밀한 계획 수립을 추진하여야 함 • 공론화위원회의 운영기간은 6개월 범위내에서 운영되며, 3개월 범위내에서 한차례만 연장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론화 방식의 운영기간은 공론화위원회의 운영기간을 검토하여 계획되어야 함 • 공론화 방식별 추진을 위한 절차가 상이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론화 방식별로 일반토론, 분임별 토론, 주제토론, 전문가 토론, 온라인 질의 응답 등 도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공론화 할 수 있는 도민참여 방식이 다양하게 존재함 – 추진되는 공론화 방식에 맞는 추진 단계별 절차에 대한 계획이 필요함 • 공론화 일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론화 사안에 따라 장기적 논의와 검증을 요하는 특수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도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공론화를 진행하는 점에 유의하여 참여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 할 수 있는 사전 일정 계획과 추진, 변경에 대한 즉각적 대처방안 마련 등의 노력이 필요함

숙의 추진 단계		공론화 진행, 공론화 결과 발표	
〈숙의 추진 단계〉 체크리스트		체크	
		예	아니오
공론화 진행	공론화 기간은 적정하게 계획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공론화 일정대로 추진되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공론화 결과 발표	공론화 운영 결과는 적정한 기간내에 발표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공론화 운영 결과는 언론, 홈페이지 등에 모두 공개되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공론화 결과는 도 정책에 반영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공론화 반영 결과는 언론, 홈페이지 등에 모두 공개되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숙의 추진 단계〉 유의사항			
공론화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론화 준비단계에서 계획된 기간, 절차, 일정이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과 계획 수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점검이 요구됨 주관부서에서는 공론화 단계별 계획에 대한 점검을 통해, 수정이 필요한 계획은 공론화 위원회의 의견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함 		
공론화 결과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론화 위원회는 공론화 결과에 대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도지사는 숙의제도를 통해 도출된 결과에 대해 도정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정책 반영 시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도민에게 공개하여야 함 공론화 결과, 공론화 결과 도정책 반영여부의 발표기간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사회적 합의의 공표와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빠른 발표가 요구됨 공론화 결과, 공론화 결과 도정책 반영여부에 대한 결과의 발표를 위하여 언론브리핑, 보도자료 배포, 홈페이지 게재, 사업부서 및 관련 자치단체 통보 등의 방법을 활용함 		

사후 관리 단계		숙의 과정 모니터링, 도민 역량강화 교육	
〈사후 관리 단계〉 체크리스트		체크	
		예	아니오
숙의 과정 모니터링	숙의 과정을 평가하는 보고서 작성 또는 보고회가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도민 역량강화 교육	공론화 경험을 교육할 수 있는 후속조치가 마련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공론화 종료 후 공론화위원회 역할부여 또는 공론화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는 후속 계획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사후 관리 단계〉 유의사항			
숙의 과정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도 조례에서는 숙의민주주의 제도 운영의 사후 과정 모니터링 내용이 없음 · 숙의제도, 공론화의 가장 중요한 점은 도민의 참여를 통한 사회적 합의 형성에 있으며,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학습은 향후 발생될 유사 사례에 대한 지침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숙의제도 이행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한 개선점 발굴, 발전방향을 담은 백서발간이 필요 		
도민 역량강화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남도도 숙의민주주의를 위한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도민역량 강화 – 주민자치·마을공동체 숙의제도 활동 의사결정 지원 – 숙의민주주의 관련 연구·조사 활동 · 숙의민주주의 제도 운영 과정의 역량강화와 함께 도민의 기본역량 강화를 위한 사전적 교육과 연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3. 제도 운영시 고려사항

- 앞서 제안된 충청남도 숙의민주주의 제도 운영 모델(안)' 과 단계별 매뉴얼의 운영과정에는 실무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존재함
 - 숙의민주주의 제도는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치단체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회적 합의에 대한 민주적 접근방식으로 과거의 전통적 주민참여 방식과 목적 및 절차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고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요인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참여자(실무자 포함)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학습기회의 제공이 필요함
 - 숙의를 통한 합리적 의사결정의 도출을 위해서는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의 제공과 이에 대한 학습기회의 제공이 필요함
 - 제도 도입 초기로 실무자나 일반시민들에게 제도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부족함
 - 따라서 참여자들이 합리적 지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사전적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공정하고 의지 있는 전문가 인력풀 확보 필요
 - 숙의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이해대립의 상황에서 그 과정을 원활히 주도할 수 있는 공정한 인력의 확보가 필요함
 - 충남도 조례에서는 공론화위원의 자격과 요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만 사안별 공론화에 적합한 전문가 인력의 지속적 발굴과 관리가 요구됨
 - 전문가는 숙의제도의 방식에 대한 전문적 이해와 실천적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하며, 전문가의 주도가 있을 때에는 다양한 의견들이 소통될 수 있는 토의 분위기와 합리적 대안을 도출할 수 있는 합의형성의 과정이 더욱 용이해질 수 있음
 - 전문가는 조정자의 역할이 아닌, 다양한 이해와 요구들이 적극적으로 제시될 수 있도록 토의를 활성화시키는 촉진자로서의 역할과 참여라는 점에 유념해야 함

05

결론 및 정책제언

- 최근 우리사회는 지역문제 해결 과정에 토의와 투표와 같은 단순 주민참여가 지역사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주민참여 방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충청남도에서도 주민 수용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숙의민주주의 제도의 도입과 실행을 추진하고 있음
- 현재 제도 도입 초기로 숙의민주주의 제도의 다양한 주민참여 방식의 이해와 제도 운영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충청남도 숙의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 모델과 매뉴얼을 마련해 보고자 하였음
 - 이를 위하여 충청남도 숙의민주주의 제도 분석, 타자치단체 운영사례 학습, 관계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도출된 시사점을 중심으로 충청남도 숙의민주주의 제도 운영 모델(안)과 단계별 매뉴얼(안)을 제안함
- 제안된 운영모델(안)과 매뉴얼(안)은 실무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의 초기 운영 가이드라인 역할과 향후 정책변화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제안된 다양한 형태의 숙의형 주민참여제도의 운영은 충남도의 활용과 운영 의지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고유한 형태로 발전될 수 있을 것임
- 하지만 앞서 살펴본 대부분의 사례에서는 주민참여 및 숙의과정이 정부 주도형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충남도에서는 이러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제도 운영에 있어서 절차는 충남도 주도형일 수 있으나, 과정은 주민주도의 숙의민주주의를 실천하여 주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일상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충남형 숙의민주주의의 확립을 위한 향후 정책과제로 제안함

충청남도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시행 2022. 1. 1.] [충청남도조례 제5034호, 2021. 8. 17., 제정]

충청남도(공동체정책과), 041-635-348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하여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숙의민주주의 실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숙의민주주의”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정책결정 과정에 도민의 참여와 토론 등을 통한 공감과 합의를 실현하여 의사결정의 정당성을 높이고 도민이 성숙해지는 민주주의 형태를 말한다.
2. “숙의제도”란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원탁회의, 공론조사, 도민배심원제 등 숙의토론 방법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숙의민주주의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숙의민주주의 실현에 참여하는 도민에 대하여 공정한 기회와 절차의 보장
2. 숙의민주주의 실현의 모든 과정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수평적 의사소통
3.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하여 참여자들에게 법령의 범위에서 관련 정보 제공 및 절차 공개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도민참여를 제도화하고, 지속가능한 숙의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숙의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도민 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③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충청남도 도민숙의제도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제를 존중하고, 숙의 과정에서 도출된 결과가 최대한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도지사는 숙의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실태조사 및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도민숙의제도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하여 충청남도 도민숙의제도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숙의의제 선정에 관한 사항
2. 숙의방식 결정에 관한 사항
3. 공론화위원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숙의제도 운영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 기능은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9조의 충청남도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6조(구성) ① 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임기가 정해져 있는 위원(이하 “상시위원”이라 한다)은 7명 이내로 하고,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는 위원(이하 “비상시위원”으로 한다)은 8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상시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비상시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상시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충청남도의회 의원
2. 학계·공공기관·도민사회단체 등의 숙의민주주의 전문가
3. 그 밖에 숙의민주주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비상시위원은 사안별로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하거나 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숙의제도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⑥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7조(임기) ① 상시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비상시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해당 의제에 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제8조(회의) ① 추진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도지사는 추진위원회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워크숍, 포럼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숙의의제 제안) ① 도지사는 도정 현안 중 숙의를 통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을 숙의의제로 제안할 수 있다.

② 도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도 주요 사업에 대하여 숙의의제로 제안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
2. 수사나 재판 중에 있거나 행정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감사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항
4. 사업계획 및 예산이 확정되어 추진 중에 있거나 처리가 이미 종료된 사업

③ 제2항에 대한 제안은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따른 선거권이 있는 300명 이상의 도민 연서로 청구인 대표가 청구한다.

제10조(숙의제도) ① 추진위원회는 선정된 의제에 따라 적절한 숙의제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숙의제도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공론화위원회) ① 도지사는 숙의제도의 실무 운영을 위하여 사안별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 및 용역 등을 통해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진위원회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공론화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도민참여단 구성에 관한 사항

2. 숙의과정에 필요한 도민교육 및 정보공개 등에 관한 사항
3. 실태조사 및 여론조사에 관한 사항
4. 숙의제도 운영을 위한 토론회 개최 등 전반에 관한 사항
5. 도출된 결과 보고 및 도정 반영에 대한 환류

③ 공론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2조(도민교육) ① 도지사는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도민에게 다음 각 호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민주주의 기본원리와 도민의 권리 및 의무, 참여 등에 관한 교육
2. 숙의민주주의 의의와 제도에 관한 교육
3.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관리, 문제해결 등 토론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4. 그 밖에 숙의제도 운영에 필요한 민주시민교육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도민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결과환류) 도지사는 숙의제도를 통해 도출된 결과에 대해 도정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정책 반영 시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도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도민역량 강화
2. 주민자치·마을공동체 숙의제도 활동 의사결정 지원
3. 숙의민주주의 관련 연구·조사 활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5034호, 2021. 8. 17.〉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 1. 1.] [충청남도규칙 제3473호, 2021. 12. 30., 제정]

충청남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부서”란 숙의과정 전체를 총괄하고 「충청남도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충청남도 도민숙의제도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개최·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주관부서”란 청구된 개별 숙의의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로 조례 제11조에 따른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3. “공론화”란 공공정책에 대하여 충청남도 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과 이해관계인 등이 참여하여 숙의하는 과정을 말한다.
4. “원탁회의”란 일정 수 이상의 도민 및 이해관계인이 참여 하여 대상 정책에 대해 토론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회의형태를 말한다.
5. “공론조사”란 일정 수 이상의 참가자 선정 후 의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토론을 거쳐 실시하는 여론조사 방법을 말한다.
6. “도민배심원제”란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기 위해 무작위 추출로 선발된 도민 배심원이 일정한 기간의 심사숙고 과정을 거쳐 정책권고안을 도출하는 회의형태를 말한다.

제3조(숙의의제 제안절차)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충청남도 주요 사업을 숙의의제로 제안하고자 하는 도민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청구인 서명부(이하 “서명부”라 한다)를 작성하여 청구인 대표명의로 해당업무 주관부서에 제안하여야 한다.

- ② 제안된 숙의의제가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경우 제안된 내용과 관련성이 가장 밀접한 부서를 주관부서로, 그 밖의 부서를 협조부서로 지정한다.
- ③ 제1항의 서명부는 서식에서 정하는 사항을 모두 기입하여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의 청구인 대표는 한 사람을 대표로 하여 청구할 수 있다.

제4조(제안요건 확인 및 통지) ① 주관부서는 숙의의제 제안이 접수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조례 제9조 제안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 대표와 총괄부서에 통보하고, 제안요건 충족시 총괄부서에 숙의의제 선정여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주관부서는 서명부 기재사항(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명 또는 날인 등)의 누락 및 식별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시군에 서명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에 대한 유효성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확인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무효로 처리한다.
 1. 서명부 제출일 기준 18세 미만이거나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서명자
 2.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거나 식별이 불가능한 서명자
 3. 동일인이 중복 서명하였을 경우 최초 이후의 서명자

4. 기재사항 일부가 나머지 기재사항과 부합되지 않는 서명자

제5조(청구의 반려) ① 주관부서는 숙의의제 청구내용이 조례 제9조의 제안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그 청구를 반려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가 청구를 반려할 경우 그 사유를 적어서 청구인 대표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 방법과 기간도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이의신청) ① 청구인 대표는 반려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총괄부서로 추진위원회 회의개최를 요청한다. 이때 주관부서는 추진위원회 심의결과 제안요건을 충족한 의제에 대해서는 숙의의제 선정 여부까지 함께 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는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시위원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이의신청된 숙의의제의 제안요건 충족여부를 심의·의결하고, 심의결과를 주관부서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제안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의결한 경우 주관부서는 총괄부서에 숙의의제 선정여부를 요청하여야 하고, 제안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의결한 경우 주관부서는 이의신청을 반려하여야 한다.

제7조(청구인 서명부의 열람) ①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제안서 및 청구인 서명부의 열람 기간,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도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열람시에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본의 해당 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열람을 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제8조(추진위원회 회의개최) ①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의 숙의의제 선정여부 요청을 받으면 제안접수일(이의신청 접수 시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상시위원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숙의의제 선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상시위원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 의결로써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② 총괄부서는 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심의결과를 청구인대표와 주관부서에 7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는 숙의의제가 선정된 경우, 선정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비상시위원을 포함한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선정된 의제의 숙의방식, 공론화위원회 등 숙의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개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상시위원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의 의결로써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9조(공론화위원회 구성·운영) ① 비상시위원이 포함된 추진위원회는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심의·의결된 숙의방식과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들을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안한다.

② 도지사는 조례 제5조제2항 및 조례 제11조에 따라 비상시위원을 포함한 추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선정된 의제의 공론화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 ③ 선정된 의제의 공론화위원회는 주관부서장이 간사가 되어 공론화위원회 업무를 수행한다.
- ④ 공론화위원회의 위원으로 추진위원회 위원이 참여할 수 있다.
- ⑤ 공론화위원회는 6개월의 범위에서 운영하고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국가적인 재난상황의 경우 공론화위원회는 운영기간과 연장횟수의 제한 없이 기간연장을 의결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추진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의 각 호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요구 및 비밀유지 등) ① 추진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는 안건에 대한 사실조사를 위해 사전에 서면조사나 현장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 ② 각 위원회에서는 의제선정 또는 숙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기관 및 단체에 자료 및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숙의과정에 참여한 위원 및 도민 등 관계자들은 숙의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결과보고서 제출 및 환류) ①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공론화 결과보고서를 공론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지사는 이를 공개한다.

- ② 공론화위원회 결과보고서 제출 후 비상시위원이 포함된 추진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가 함께 해당 공론화위원회 운영 전반을 평가하여 평가보고서를 작성한다.

제13조(운영세칙) 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부칙 〈규칙 제3473호, 2021. 12. 30.〉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충청남도 내부자료
- 김길수(2018).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 사례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32(2).
- 김도운(2009). 심의민주주의의 가능성과 한계 : 광주 북구와 울산 동구의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한 성찰. 한국사회학회 2009 전기사회학대회 논문. 한국사회학회.
- 김소연(2006). 성공한 합의제도?: '울산 북구 시민배심원제'의 평가와 함의. 시민사회와 NGO. 4(2).
- 문태현(2010). 심의민주주의적 정책결정의 논리와 한계. 한국행정논집. 22(3).
- 오용석·진상현. (2016). 시민참여 기법을 도입한 대구광역시 지역에너지 계획의 수립과정분석. 환경사회학연구, 20(2).
- 은재호(2009). 참여적 의사결정기법의 제약요인 연구: 울산 북구 음식물 자원화시설 건립을 둘러싼 시민배심원제도 분석. 한국정책학회보. 18(2).
- 정규호(2005). 심의민주주의적 의사결정논리의 특성과 함의. 시민사회와 NGO, 3(1).
- 정무권(2011). 행정민주주의와 공공성: 심의민주주의와의 접목. 사회과학연구, 50(2).
- 정우연(2022). 신구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 대한 시민참여단의 평가: 정치적 이념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조사연구. 23(3).
- 정정화(2011). 공공갈등과 합의형성: 심의민주주의 방식의 적용과 한계. 한국행정논집, 23(2).
- 정형안·이윤석(2020). 숙의민주주의의 실현: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 관련 쟁점들에 대한 경험적 접근. 조사연구. 21(2).
- 조현석(2006). 숙의적 시민참여 모델 연구 : 울산시 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 건립 사례. 과학기술연구. 6(1).
- 진상현·오용석·오수미(2019). 대구광역시 제5차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관련 시민참여계획단 운영 용역. 대구경북연구원.